

[총평 : 이경]

더운 여름, 지친 체력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분들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 서울시 9급 행정학 시험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주제는 없었기에, 수험생 분들이 크게 당황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제는 익숙하더라도 다소 까다로운 지문(예 : 로위의 재분배정책의 사례, 메타평가의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행정학 시험은 만점을 받을만큼 아주 쉬웠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문별 문항분포>

구분	총론	정책	인사	조직	재무	자치
문항 수	5	3	4	4	2	2

2018년도 행정학 시험의 경향을 보면,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기본적으로 출제하되, 시험의 성격에 따라 지문에서 난이도 조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원을 적게 뽑는 시험은 변별력을 두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게 되죠.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은 조금 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너무 어렵거나 과중한 문제를 출제하여 성적의 분포도가 하향조정되면, 출제자에게도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험 경향을 고려할 때 행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구자(강사)가 아니라, 단기간에 시험을 끝내야 하는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행정학 외에도 여러 과목을 분산하여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요한 것을 100%로 아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수험방법**입니다. 물론, 제일 안전한 공부방법은 모든 지식을 숙지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제한된 시간과 인지능력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전략적 사고와 우직한 태도는 수험을 넘어 모든 일에 있어 성공의 필수요소입니다. 시험에 있어 전략적 사고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의미하며, 우직한 태도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추어야, 시간의 낭비없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우직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보낸다면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갖추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략적 사고와 우직한 태도는 무슨 일을 하건, 성공을 도와주는 아이템이니까요.

이제, 이번 시험은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

- 이 경 드림-

1.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체제이론	ㄴ. 과학적 관리론
ㄷ. 인간관계론	ㄹ. 신제도이론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ㄱ → ㄹ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ㄷ → ㄴ → ㄹ → ㄱ

[조직-1] 조직이론의 변화

② [O]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1900년대 초반, 인간관계론은 1930년대, 체제이론은 1950년대, 신제도이론은 1980년대에 등장하였다.

<주요 행정·조직이론의 변화>

1900년대	1930년대	1950년대	1980년대
고전적 조직이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 ·후기인간관계론	현대적 이론 ·체제이론 ·상황적응론 ·거시조직이론	현대적 이론 ·신제도이론 ·공공선택론

2.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② 타자에 대한 대상화를 거부한다.
③ 고유한 이론의 영역을 거부한다.
④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을 거부한다.

[총론-1] 포스트모더니즘

- ① [X] 포스트모더니즘은 단일한 진리(text)를 거부하고 상황(context)을 고려한 맥락의존적 진리를 중시한다.
▶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한다.
- ② [O] 대상화는 타인을 물건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나와 동등한 감정과 욕구를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모더니즘 하에서는 인간을 분류별로 나누어 대상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를 배격하고, 인간을 도덕적 타인으로서 인식한다.
- ③ [O] 포스트모더니즘은 경계의 해체를 중시한다.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 학문간의 경계 등을 해체하고 융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④ [O] 권력을 중시하는 것은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서의 질서를 부인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지배를 야기하는 권력과 질서를 거부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 i. 다양한 견해로 구성
ii. 인간행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 중시
iii. 참여 지향 : 관료와 시민간 상호연계와 참여통한 대화, 협상 및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등을 중시
iv. 행정현상의 상황적 맥락을 강조

3.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인사-1] 직위분류제

- ④ [X]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계급제의 장점이다. 기존 직위를 없애고 인력을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 ① [O]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격,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등이 직무명세서에 기재되므로, 근무결과가 이를 만족시켰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O] 직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수평적, 수직적 권한·책임관계가 명확하다.
- ③ [O] 직무가 전문화되고, 전문화된 직무에 따른 인사경로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전문직업인 양성 및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4. 정부회계제도의 기장방식에 대한 <보기>의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에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ㄴ.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 | | |
|--------|------|
| ① 현금주의 | 복식부기 |
| ② 발생주의 | 복식부기 |
| ③ 발생주의 | 단식부기 |
| ④ 현금주의 | 단식부기 |

[재무-1] 정부회계제도

② [O] 거래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기장하는 것이 발생주의,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는 것은 복식부기이다.

<회계제도의 특징>

기장	단식부기	·차변대변 구분없이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중심으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재 ·장점: 사용이 편리, 처리비용이 적음 ·단점: 정확성 검증 곤란
	복식부기	·거래의 발생사실을 바탕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 회계기록의 자기검증이 가능 ·장점: 결산과 회계검사 용이, 정보의 적시성 제고,
거래	현금주의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 형식주의 ·장점: 절차가 간단하고 단순, 적은 비용, 재정파악이 용이 ·단점: 거래의 실질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경영성과 파악 곤란
	인식 기준 발생주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실질주의 or 채권채무주의 ·장점: 정확한 원가산정으로 성과 파악 용이, 재정 건전성 확보 출납 폐쇄기간이 불필요 ·단점: 채무 파악이 곤란, 회계처리비용이 많음, 자의적 추정 가능성

5. 전통적 관리와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데 비해 TQM은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 ② 전통적 관리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하는 데 비해 TQM은 주로 팀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 ③ 전통적 관리체제는 상위층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체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TQM은 절차 내에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④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조직-2] 전통적 관리와 TQM

④ [X] TQM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TQM에서 낮은 성과는 팀의 책임으로 인식한다.

▶ 전통적 관리체제는 낮은 성과의 원인을 관리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데 비해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① [O] 전통적 조직은 기능 중심의 관료제적 형태이다. 따라서 전통적 관리체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업과 통합을 중시하게 된다. 반면 TQM은 전체 업무과정에서의 끊임없는 개선을 중시하므로, 절차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조화된다.
- ② [O] 전통적 관리는 굴릭(Gulick) 등이 강조한 분업, 통합 등을 말한다. 반면 TQM은 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 ③ [O] 전통적 관리체제는 집권성이 강하다. 상층부가 주요한 정보 및 의사결정을 독점한다. 반면 TQM은 수행화된 구조인 팀이 주된 조직이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적 시에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게 된다.

6.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총론-2]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④ [X] 실체설은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지 않는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정의하고, 이를 지향하는 적극적 행정을 주장한다.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이다.

▶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 ① [O] 과정설은 공익은 사익의 조정결과라고 본다. 충돌하는 사익이 상호조정을 거친 것이 공익이라는 입장이다.
- ② [O] 실제설은 공익은 사익의 총합 이상의 것으로 본다. 사익과는 다른 차원의 이익임을 강조한다.
- ③ [O] 실제설은 실존적 공동체의 이익으로서 공익을 인정한다.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강조한다.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구 분	실체설(적극적 인식론)	과정설(소극적 인식론)
공 익	·사익을 초월한 규범적·도덕적 개념 ·전체효용의 극대화, 절대가치, 공유의 이익	·사익의 총합 (공익은 사익의 민주적 조정과정) ·다수 이익들 간의 조정·타협의 산물
형 성	·선협정·규범적인 것으로 엘리트나 관료ja 실체를 규정	·과정·제도·절차를 통해 형성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보장
특 징	·사익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독자성을 인정 ·공익이 우위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갈등 부재 ·과정설보다 일관적 체계적 가치판단 가능 ·공동체와 국민의 결속감 강화	·현실적·개인주의적 공익개념 ·공익향상을 위한 정책과정 합리화 필요
관 료	·목민적 역할(적극적 역할) 공무원 스스로 공익의 실체를 파악하고 행동	·조정자(소극적 역할)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한 계	·공익의 구체적 내용이 다양해 실제파악 곤란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하여 개인이익 침해 → 민주주의와 상충될 우려 ·추상적 개념, 이념적 경직성	·집단 간 힘의 불균형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 ·집단 이기주의의 발생 가능
설명력	·국가주도의 발전이 가능한 개발도상국	·다원주의적 협이가 가능한 선진국
관 점	·엘리트주의·집단주의·유기체·공동체적 관점	·다원주의·자유주의·개인주의
정책결정	·합리모형	·점증모형

7.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인사-2]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③ [O] 직렬의 대단위가 직군이다.

- ① [X] 직무의 종류가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은 '등급'이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다르다.
- ② [X]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다른 것은 '직렬'이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 ④ [X]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이다.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구분	설명	예시	구성범위
직위 (position)	·한 사람의 근무가 필요한 직무와 책임의 양	·00법 담당	·1인의 업무량
직급 (class)	·채용, 보수 등을 동일하게 취급가능한 '유사한 직위의 집단'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유사	·기술 9급, 행정 9급	·직위의 군
직렬 (series of classess)	·직무의 종류는 비슷,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	·행정직군 내 행정직렬, 감사직렬	·직급의 군
직군 (occupational group)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행정직군, 기술직군	·직렬의 군
직류 (sub-series)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행정직렬 내 일반행정직, 법제직, 재정직류	·직무의 군
등급(grade)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이 유사 ※ 직무등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하여 비슷한 보수가 지급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 외무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적용		·직위의 군

8.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 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용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정책-1] 정책평가

- ④ [X]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정책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 ▶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증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9.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 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해 권한이 명시적·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지방자치-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① [O] 주민자치는 영미계 국가(영국과 미국), 단체자치는 대륙계 국가(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다.
- ② [X]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가진 주민에 의한 행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내용적·본질적 요소이며, 단체자치는 국가에 의한 분권을 중시하므로 지방자치의 형식적·법제적 요소이다.
- ③ [X] 단체자치는 주로 일반적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되는데,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지 않다. 반면, 주민자치는 지자체 사무와 관련한 법률을 직접 제정하므로 자주적 처리권이 크다.
- ④ [X] 단체자치는 국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행정통제가 주된 방식이다. 주민자치에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로 행해진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

	단체자치(국가-자치단체)	주민자치(자치단체-주민)
의미	·지방분권 사상에 입각한 법률적 의미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정치적 의미
단체 성격	·이종적 성격 : 자치단체 + 국가하급기관	·순수 자치단체 : 지방정부
정부 형태	·기관대립형 : 집행기관 우선	·기관통합형 : 의회 우선
중앙지방 관계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지방정부의 사무수행	·상호의존+기능적 협력관계
조세	·부가세(과세주체 : 국가)	·독립세(과세주체 : 자치단체)
사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고유사무(위임사무 X)
권한	·포괄적 수권 : 포괄적 위임주의	·개별적 수권 : 개별적 지정주의
중점	·중앙정부와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
통제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자치권	·실정법상 부여 :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천부적 권리 : 국가이전의 고유권한
예	·대륙계 국가 : 독일, 프랑스 등	·영미계 국가 : 영국, 미국 등

10.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위(Low)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② 로위(Low)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 ③ 로위(Low)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조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 ④ 리플리와 프랭킨(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책-2] 정책유형

- ② [X] 로위(Low)가 정책유형을 구분한 기준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이다. 비용의 부담주체를 고려한 것은 윌슨(J.Q.Wilson)의 규제정치이다.

	개별적 행위에 강제력 적용	행위의 환경에 강제력 적용
간접적 강제력 행사	분배정책	구성정책
직접적 강제력 행사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 로위(Low)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 ① [O] 로위는 정책에 따라 정책주도자, 집행과정의 갈등양상 등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는 1960년대 다원론자와 엘리트주의의 주장을 통합한 것으로, 규제정책의 경우는 다원주의자의 주장처럼 이익집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갈등이 상당하며, 재분배정책은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해집단 간 갈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집행이 용이하고 정형화된다고 보았다.
- ③ [O]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는 국가의 대부자금을 정책적으로 선호하는 분야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대부하기로 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 ④ [O] 보호적 규제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며, 경제적 규제는 안허가 등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기 위한 규제이다.

11.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④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재무-2] 예산안 의결방식

- ② [X] 우리나라에서의 예산은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법률과 무관하다. 따라서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를 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 ▶ 예산으로 법률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O]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반면,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국회의결로 확정된다.
- ③ [O] 예산은 정부만이 편성한다. 반면, 법률은 정부 및 국회가 모두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O] 예산삭감은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결정할 수 있지만, 예산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증액 및 새 비목 설치제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과 법률의 차이>

구분	예산	법률
제출권자	·정부	·정부와 국회
절차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 30일 전까지 심의	·제한없음
수정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은 설치불가	·제한없음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불가	·대통령의 거부권 있음
공포	·국회의결로 확정, 공포 불필요	·법률 효력이 발생하려면 공포 필요
효력	·세출예산에 한하여 1 회계연도에 국가기관만 구속	·국가기관, 국민에 대한 구속력 존재

12.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 ②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 ③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은 없고 집행권만 갖는다.
 - ④ 자문위원회는 계선기관으로서 사안에 따라 조사·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3] 위원회

- ① [O] 의결위원회, 정계위원회 등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권이 없다.
- ② [X]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의결위원회이다.
- ③ [X]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갖는다.
- ④ [X] 자문위원회는 막료기관(staff)으로 조사, 분석, 자문,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사례>



13.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 ② 무의사결정(non decision making)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들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정책-3] 정책주도자 이론

- ① [X] 헌터(Hunter)는 명성접근법을 통해 애틀랜타의 유명인사(명성엘리트)는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 ▶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하였다.

- ② [O]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 전반에서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는 이슈가 제기되거나 집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권력을 말한다. 신엘리트론자들이 주장하였다.
- ③ [O] 달(Dahl)은 뉴헤이븐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엘리트는 분산되어 경쟁하며 공중의 요구에 대응한다고 보면서, 정책에 따라 엘리트의 행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O] 신다원주의는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한 엘리트이론의 비판을 수용한다. 모든 이익집단은 동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특권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14.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2] 사무처리

- ③ [X] 보충성의 원리(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담당하고 그 외 지자체는 보충적으로 개입한다)에 따라 기초지자체인 시·군 및 자치구가 사무를 먼저 처리한다.
-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2. 시·군 및 자치구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① [O]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해지 수 없다.
- ② [O]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 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④ [O]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다.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중장기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15.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한다.
 - ②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 ③ 피터스(B.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으로 시장모형, 참여정부 모형, 유연조직 모형, 저통제정부 모형을 제시한다.
- ④ 신공공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가, 경쟁, 고객지향을 강조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체계, 임무중심을 강조한다.

[총론-3] 정부개혁이론

- ② [X]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NPM)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론적 흐름이다. NPM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면서 형평성이나 공익과 같은 본질적 행정이념을 경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축소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역량 및 업무의 강화를 주장한 것이다. 즉,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를 축소하고 재집권화를 추구하며 규제를 강화한다(재규제).
- ▶ 탈신공공관리(post-NPM)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역량을 강화하며,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축소,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한다.
-
- ① [O]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유인체계 등의 시장적 장치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③ [O] 피터스(Peters)는 계층제적 정부의 대안으로서, 분권과 유인기제를 활용하는 시장적 정부, 대내외 참여와 협의를 중시하는 참여적 정부, 가상조직과 임시조직을 강조하는 신축적 정부, 관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탈내부규제 정부를 강조하였다.
- ④ [O]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적 기제인 시장, 경쟁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인식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정부는 민간의 업체를 조율하는 방향잡기(steering)이 역할을 중시한다.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구축하여 시장-시민사회-정부의 연계망(협력체계)을 조정하고 임무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정의 방향을 잡을 것을 강조한다.

16. 조직문화의 일반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소속 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한다.
- ②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시킨다.
- ③ 조직이 처음 형성되면 조직문화는 조직을 묶어주는 집착제 역할을 한다.
- ④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조직-4] 조직문화

- ④ [X] 조직문화는 조직 내의 결속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변화에 저항하게 되므로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저해한다.
- ▶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문화는 조직혁신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
- ①③ [O] 조직문화는 소속 조직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하여 소속감과 몰입도를 높인다.
- ② [O] 조직문화는 조직의 규범 등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므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형성하고, 일탈행위 등을 방지한다.

17.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 ② 대표가 될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인사-3] 직무평가방법

- ④ [O] 점수법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이 편리하고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용이하여 자주 활용되며, 점수에 따른 직무급 결정이 용이하다. 반면 직무평가요소 산출 및 계산에 전문성과 시간, 지식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
- ① [X] 등급기준표를 활용하는 것은 분류법이다.
- ② [X] 대표직위를 기준직무로 선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은 요소비교법이다.
- ③ [X] 상대적 가치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방식으로 서열법에 해당한다.

<직무평가방식>

점수법	·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대상 직무의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합을 구하는 방식, 절대평가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요소(지식, 책임도, 조건 등)에 요소별 평가점수(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	
	A. 장점 · 작성이 편리하여 가장 많이 활용 · 평가결과 수용이 용이 ·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음 · 점수에 따라 직무급을 결정 용이	B. 단점 · 직무평가요소 산출 및 계산에 전문성과 시간 및 지식 필요
서열법	·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직무의 중요도와 장점에 따라 서열화 · 기준: 직무 난이도, 필요한 교육훈련, 작업조건 등	
	A. 장점 · 가장 간단	B. 단점 · 직무 간의 차이가 명확하거나 평가자가 모든 직무를 잘 알고 있을 때 적용용이 · 직위가 복잡하고 수가 많으면 적용이 어렵고 피상적인 평가
요소 비교법	· 평가요소별로 직무와 직무를 평가하여 비교, 상대평가 · 공통 평가요소 선정 → 대표직위 설정 → 대표직위에 따라 평가요소 서열화 → 대표직위 보수결정 → 그 외 직위 보수결정	
	A. 장점 · 점수법의 임의성을 보완	B. 단점 · 객관적이고 정확
분류법	·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지정된 등급기준표에 의해 직무를 해당등급에 배치	
	A. 장점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적용용이	B. 단점 · 등급기준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18.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세무·감사·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인사-4] 공직자윤리법

- ④ [X]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 ① [O] 정부직 공무원, 4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부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직 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 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 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 공무원
10. (이하 생략)

- ② [O]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가족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선물의 가액은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이다. 시장 가격을 환산하기 어려운 선물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선물평가단을 구성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 제1항(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 외국단체 포함 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②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선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③ [O] 감사업무, 회계업무, 인허가 승인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은 재산등록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 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 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대상>

등록대상	공개대상
·국가 정부직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지방 정부직 : 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등	
·일반직 및 별정직 : 4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 1급 이상
·외무공무원 : 6등급 이상	·외무공무원 : 12등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대령 이상의 장교 및 군무원	·중장 이상 장교
·총장 이상의 경찰공무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 경찰청장 ·소방청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 7급 이상 공무원	·지방 국제청장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대민관련 인허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인 세관장
- 조세부과징수 조사·심사	
- 감사원 소속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 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등	·등록대상에서 공기업 상임이사 제외

문 19. 정부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통제가 아닌 것은?

- ① 감찰통제
- ② 예산통제
- ③ 인력의 정원통제
- ④ 정당에 의한 통제

[총론-4] 정부통제

- ④ [X] 감사원 등 공식적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통제는 내부통제이고, 정부 외 비공식 기관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으로,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20.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мок(Dimock)은 기술적 능률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이 그 목적가치인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산출을 극대화하고 그 산출이 인간과 사회의 만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1930년대를 분수령으로 하여 정치행정이원론의 지양과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전환과 때를 같이해서 행정에서 민주성의 이념이 대두되었다.
 - ③ 효과성은 수단적·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 ④ 합법성은 법률적합성, 법에 의한 행정, 법에 근거한 행정, 즉 법치행정을 의미한다.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수단가치인 법의 준수가 강조되어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 형식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

[총론-5] 행정이념

- ③ [X] 효과성은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로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결과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절차 및 과정에서의 비용절감과 관련된다.
 - ▶ 효과성은 수단적·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
- ① [O] 사회적 능률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디мок(Dimock)은 사회적 능률성이 인간의 상위 심리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민주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 ② [O]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1930년대에 행정국가 등장하였다. 이전의 정치행정 이원론 시기의 행정은 합법성과 절약, 능률 등을 강조하였으나, 이후의 행정은 정치행정 일원론적 시각에서 정책결정을 통한 시민의 의사 실현, 즉 민주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 ④ [O] 합법성은 법에 의한 행정을 말한다. 이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민주주의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적 행정가치이다. 그러나 합법성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절차를 위해 목적을 경시하는 목표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